

‘출판 기념회’인가 ‘출마 모금회’인가

총선 출마 예정자들 잇따라 열어
철학·비전 알리기 본래 취지 퇴색
책 판매 선거자금 마련 통로 악용
국힘은 당 차원 자체 분위기
신인들 유일한 소통창구 역할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봇물을 이루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의 철학과 비전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출판기념회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출마 기념회’이자 신중 ‘정치 공해’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8일 지역평가 등에 따르면 최근 출판 기념회는 정치인들이 출마 전 거치는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판 기념회는 조직을 재확인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장으로 악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출판 기념회가 ‘자서전’을 판매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자리가 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모금액 제한이나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모으기 가장 쉬운 통로가 됐다는 것이다.

현 선거법에 따르면 책을 무상으로 주거나 1인당 1000원 초과와 다과 제공은 불가능하다. 선거구민(출마예정지)에게 무작위로 초청장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으며, 전문 직업 가수, 합창단 공연은 금지돼 있다. 장소나 초청 인원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출판 기념회 자리에서 후보자 업적 홍보 등은 금지된다.

또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출판 기념회를 열 수 있다. 4·10 총선일 기준 내년 1월 11일부터 개표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라 열릴 전망이다.

정치인들은 모금을 위해 출판 기념회를 선호하

는 분위기이지만, 초대받은 이들 중 대다수는 “매주 돈을 내야 하는 애경사가 이어지는 느낌이다”며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 출판 기념회가 시민과 만날 수 있는 통로이며, 합법적인 후보 홍보 수단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지만, 초청 연락 자체만으로 ‘청구서’ 같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한 지역 기업 고위직 관계자는 “출판 기념회를 계획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고향, 동문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참석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당황스럽기도 하다”며 “바쁜 일정에 힘들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또 출마 예정자 중 작가를 섭외해 대필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출판하는 탓에 책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선거 전초전’으로 자리잡은 출판 기념회에 부정적 인식이 있다 보니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소 행사 개최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호남 민주당 현역 의원 중 20~30% 가량만 현재 출판 기념회를 열거나 계획 중이며,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 대다수는 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있다.

앞서 출판 기념회가 모금 통로로 전락하면서 여러 차례 출판 기념회 투명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하지만 신인 정치인 등에게는 출판 기념회가 유일한 ‘소통 창구’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역 의원은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아도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 정치 신인들과 기본적인 조건이 다르다”며 “도전자 입장에서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르겠나. 사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면 부자들만 정치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선-본선’인 광주·전남의 지역 특성상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고,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신인의 경우 출판기념회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 교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범위를 벗어나 유일하게 허용하는 게 출판 기념회다. 광주·전남 지역은 경선이 곧 본선이기 때문에 본선보다 경선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출판 기념회를 통해 후보자의 개성과 능력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이 참고할 수 있다면 유망한 현역 의원과 신인 정치인에게 틀어주는 잣대를 다르게 하는 등 출판 기념회의 긍정적 측면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백운광장 푸른길 브리지 공사 ‘차량 통제’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일대 푸른길 브리지 상부 가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기간에는 일부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29일 밤 11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백운광장에서 백운초 방향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28일과 30일, 12월 6일 새벽 1시부터는 1시간동안 모든 교차로의 통행이 차단된다. /리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북한군 판문점서 권총 착용... ‘JSA 비무장화’ 파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파고·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군사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도 폐기할 것이다.

북수의 한미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주 후반부터 JSA 북측 경비원들은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이다.

우리측 JSA 경비원들은 아직 비무장화를 유지하고 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이 JSA에서 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우리측도 재무장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경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소 북한군의 해안포 개문은 1~2개소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0개소 이상으로 늘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서해 NLL 인근 해안포 입구에 설치된 문은 닫아놓아야 한다. /연합뉴스

나주혁신도시 주민들 “대중교통 불편해요” ▶6면

KIA 마무리 캠프 종료, 진차 경쟁 자금부터 ▶18면

ART 투어리즘-샌프란시스코 공원 미술관 ▶22면

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

정무위, 기촉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8일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정부·여당과 재계 등에서 일몰 연장을 위한 재입법을 촉구해왔다.

취약계층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이날 정부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정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사업 실증장비 현황 및 사용안내

사업내용

- 3개분야(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AI 기반 실증장비 77종 구축
-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

구축장소

- AI 자동차 실증센터
광주그린카진흥원 기술지원동 (광주광역시 북구 삼거동 509)
- AI 에너지 실증센터
한국광기술원 연구동, 실험동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108번길 9)
- AI 헬스케어 실증센터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실증장비

- 장비활용(제품 안정성/성능평가) 및 실증서비스
- 실증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제공



신청절차

